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막대한 경제 효과 기대



글_홍현기
경인일보 기자
hhk@kyeongin.com

글쓴이는 2010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로 재직 중이다.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한국신문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곳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2차 이사회에서 송도가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가 공식 인준됐다. 무게감 있는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 본을 제

치고 송도국제도시가 유치도시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준 일이기도 했다. 특히 GCF는 전 세계의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GCF란

정부와 인천시 등에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둡기 위해 GCF를 환경분야의 세계

은행이라고 소개해왔다. 세계은행이 각국의 경제 성장세와 투자·금융 등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GCF도 전 세계 환경 정책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유엔 산하기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GCF는 앞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탄소감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선진국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이 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이 돈으로 탄소저감시설 등을 설치,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

탄소배출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이 아무런 지원 없이 개도국에 탄소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GCF를 설립, 개도국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갖고 세계 각국은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GC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GCF 이사국들은 다리 역할을 하는 데 대한민국이 적합하다고 봤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보다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 이사국 대표는 GCF 사무국 유치도시 발표 직후 “한국이 선정된 가장 큰 요인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며 “특히 개도국에서 한국이 유치국가로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기금규모, 국가별 엇갈리는 의견

GC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서로의 입장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기구다. 개발도상국은 지원을 받는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길 바란다. 선진국은 지원 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의견차로 인해 아직까지도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GCF 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들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기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

들은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까지 마련할 자금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앞으로 3년간 3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정도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내년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 장기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 당시 2020년 8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 나와 “2020년 이후 매년 1천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실제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자금 출연이 안 되면 GCF의 경제적 효과는 성급하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기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세계의 석학들의 말을 인용, 기금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기획관은 “매킨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민간 자본이 3조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며 “GCF가 제대로 작동하고 투자 리스크를 공유한다면 상당부분이 녹색기후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 GCF 제2차 이사회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20일까지 3일간 열린 이사회에는 24개 이사국과 각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이사회가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내부 모습.



▶▶ 송영길 인천시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GCF 민간유치위원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사진 왼쪽부터)이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사무국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 확정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 서로 감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카운셀 멤버이기도 한 영국 정경대(LSE) 니컬러스 스턴 교수의 말을 인용, “연간 개도국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되는 규모만도 1조 달러에 달한다”며 기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F와 그린 트라이앵글

이명박 정부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그린 트라이앵글’이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CF 사무국이 환경분야의 기금을 담당한다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GGGI가 전략(환경지식)을, GTCK(한국녹색기술센터)가 기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 기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계의 환경 분야 네트워크가 한국에 꾸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AIST에 녹색성장대학원을 설립,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한국이 주도로 만든 국제기구다.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GGGI 설립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탄생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GGGI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2010년 6월 설립됐으며, 지난해 10월 23일 창립회의를 통해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GGGI의 창립회원국은 덴마크, 호주,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키리바시,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영국, UAE,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는 본부 소재지국으로서,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22일 GGGI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무국에 설립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 GGGI는 올해 이사회를 가지고 내부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GTC-K(Green Technology Center-Korea)는 녹색기술 R&D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 서울 홍릉에 문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과 기획과제를 추진했다.

GCF 파급효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GCF 사무국이 유치되면 매년 3천8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도 이 관측이 GCF 효과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KDI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GCF 사무국에는 500여 명의 주재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이 송도에서 생활하며 매년 쓰는 돈과 환경 관련 각종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숙박·관광·고용 유발 효과 등을 모두 따져봤을 때 매년 3천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주재원 규모 등에서 변동 사항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송도경제자유구역 투자 기대효과와 인지도 상승,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

GCF 사무국 유치는 안전보장 강화,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GCF 앞으로 190여개 회원국을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구에 총포를 겨누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 GCF가 대북관계를



▶▶ GCF 사무국이 사용하게 될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아이타워(I-Tower)'.



▶▶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된 지난 10월 20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센트럴 공원에서 시민들이 GCF 사무국 유치에 환호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을 지원,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미래

인천시는 연간 120회의 크고 작은 환경 관련 국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CF 주재원 또한 초기 500명선에서 장기적으로 8천 명까지 늘린다는 게 UN의 계획이다.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환경 자금을 관리하는 GCF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크다.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 세계 금융권의 관심은 물론 탄소 저감 분야와 관련된 세계적 기업과 연구자원, 최신기술 등이 모두 GCF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도시에 집중된다.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인천이란 도시를 '환경 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무형의 자산을 GCF 유치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유형·무형의 파급 효과들은 앞으로 인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GCF는 당장 올해 완성된 모습으로 들어설 수 없다. 국제기구는 긴 호흡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GCF는 2020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와 연관이 있다. 지난 2011년 더반에서는 선진국,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2020년부터는 선진국, 개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협상은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상황이다. GCF는 신기후체제 속에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GCF는 오는 3월 열리는 3차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선정할 것이다. 2014년에는 신기후체제와 관련한 세계정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CF 사무국이 본격 운영되도록 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GCF를 조기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적정비 및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GCF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가 국제적인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ST**